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7월 25일 월요일 (음 6월 22일) 제160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 비리사학, 교육청 파면 지시에 '우이독경'

(완주 게임과학교)

수익원 횡령 등 비리 '들탕' 교장 포함 교원 5명 대상  
도교육청 파면 요청 불구  
사립법인은 수용 안해

각종 비리로 물의를 빚은 완주의 한국게임과학교가 전북도교육청의 징계 지시를 잇달아 무시하며 배정을 부리고 있다.

학교법인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현행 사학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2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각종 비리 행위가 드러난 정모(60) 교장 등 교원 5명을 파면 또는 해임하라고 지난 5월 초 게임과학교의 학교법인인 성순학원에 요구했다.

전북교육청의 특별 감사 결과 이들이 2013년부터 작년까지 6억여원의 인건비와 급식비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이 학교 설립자이자 교장인 정씨는 급식비 2억6,000여만원을 가로채고, 아내와 지인을 기숙사 관장과 방과 후 교사로 채용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해 3억여원을 횡령했다.

정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또 감사 자격도 없는 자신의 딸과 조카 등을 방과후 학교 강사와 시간 강사로 채용해 4,000여만원을 주기도 했다.

전북교육청은 범행을 주도한 정씨와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행정실장, 행정실 직원, 기숙사 사감은 파면을 요구했다.

성순학원의 법인과정은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이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성순학원은 한 달 후인 지난 달 초 5명 가운데 3명은 견책 처분을,



일 년 가운데 가장 더운 대서(大暑) 절기인 지난 22일 오후 어느 화단에서 양중맞은 모슴의 참새 2마리가 잔디밭에 앉아 더위를 피하고 있다.

1명은 징계유예를 하기로 했다고 통보해왔다.

견책은 경징계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국·공립과 달리 사립교에서는 사실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징계유예는 징계를 미룬 것으로, 징계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마찬가지로, 교장이었던 정씨에 대해서도 퇴직했다는 이유로 징계 자체를 하지 않았다.

국·공립학교의 교원은 공금 횡령액이 200만원만 넘어도 해임 또는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6억 원이 나 횡령한 '사립' 교원들은 '해임법인'에 의해 교단을 밟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이 지난달 17일에 이어 지난 14일 세 번째 지시를 했지만 임장 변화는 요원할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법인의 이런 태도에 전북도교육청이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허점이다.

비리관련 사립법인은 전북도교육청의 자체 감사 결과에 대한 징계 처분요구를 '온전히' 수용한 적이 없을 정도다.

실제 2014년 1월~이달 현재 도교육청의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현황을 보면 '파면' 처분요구가 4건이 있었다. 하지만 각 법인은 '해임', '정직', '경고'와 '주의' 각각 1건으로 낮춰

결했다.

또한 도교육청의 '해임' 처분 요구에 대해 해당 법인은 '정직'으로 떨어뜨렸으며 도교육청의 '정직'과 '감봉', '견책'의 각종 처분요구에 관련 법인은 '감봉'과 '견책', '불문경고', '주의' 등으로 무더기 하향 징계하는데 그쳤다.

도교육청의 해당기간 40건에 해당하는 징계처분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감봉1건'과 '견책 1건' 등 총 2건뿐이다.

교내 실권을 갖고 있는 학교장과 행정실장의 징계처분 현황에서 더욱 드러난다.

2008 ~ 2014년 6월 현재 전북도교육청의 학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한 징계요구는 각각 12건, 9건이었다.

학교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대해 자체 경감한 경우는 3건, 행정실장의 경우 징계 미이행 건은 1건, 자체 경감한 경우는 3건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학 부정부패를 예방하려면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은 수준의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는데 교육 당국의 권한이 제한적이다 보니 무력화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근본적으로는 이를 불러일으키는 현행 사학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도, 하반기 전보인사 단행

개인별 희망보직 고려  
효율적 인력배치 중점

전북도는 지난 22일 민선6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삼락농정, 토탈관광 등 도정 5대 핵심사업의 가시적인 성과창출과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인 탄소산업 등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적재적소 인력배치를 고려해 5급 82명, 6급이하 155명 등 238명 규모의 하반기 정기 전보인사를 실시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전보인사는 지난 1일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연속성을 고려해 전보를 최소화하고 실국장 추천과 개인별 희망보직을 병행한 전보인사방침을 사내 게시판을 통해 공지했고, 인사부서에서는 실국 추천과 개인별 희망부서를 토대로 개인과 조직 역량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데 중점을 뒀으며, 또한, 승진 내정자, 현부서 1년이상 근무자 중 전보 희망직원, 육아, 출퇴근 등 개인 인사고충 등의 사유로 전보를 희망하는 직원, 현부서에서 4년 이상 장기근속한 직원을 전보대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전보인사를 통해 현업부서에 대한 지원강화와 도정 현안요구를 반영한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로 도민에게 희망을 주고 역동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 냉면값 서울 8천원대

전북은 6천원대 기록

두더운 여름철 즐겨먹는 시원한 냉면이 가장 비싼 지역은 서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전북은 비교적싼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행정자치부의 지방물가정보에 따르면 냉면 한그릇 값은 서울과 부산이 8154원, 8143원 등 8000원대로 가장 비쌌다.

이어 경남 7850원, 경기 7735원, 대구 7667원, 울산 7600원, 대전 7300원, 제주 7167원, 인천 7083원, 경북 7038원 등이 뒤를 이었다.

냉면가격이 가장 싼 지역은 충북으로 6571원을 기록했다.

광주는 6900원, 강원과 전남 6778원, 충남과 전북이 각 6850원으로 6000원대를 나타냈다.

/박용주 기자

## 전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소극적'

육외간판 설치 등에만 그쳐 수년째 변하지 않아 업체 등록도 '꺼림직'

전북도가 '착한 가격 업소' 지정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착한 가격 업소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년째 지원 규모와 방식이 변하지 않아 업소들의 착한 가격 업소 등록 관심을 떨어뜨리고 있다.

여기에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위한 모니터링원 지원까지 폐지하면서 전북도의 관심이 멀어지고 있는게 아나는 지적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지난 2009년 전북도

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이며 전국 확대 시행되고 있다.

사업 초기인 지난 2011년 212개, 2012년 353개 등 점차 지정을 늘려 나가자 소비자 보호와 물가안정에 특목히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재료비 인상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부적격 업소들이 나오면서 지난 2015년에는 346개로 줄어드는 등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 전북은 착한가격업소에 지정되면 육외간판, 쓰레기봉투 등 단순 지

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서울과 부산, 대구 등 타 지자체의 경우 주요 버스노선에 음성홍보를 지원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홍보에 적극적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전북역시 예산과

지원 방식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업소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보면 음식점이 많은데 현실이고 자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인증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다양한 분야와 그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전북도·전주시 인사 명단  
홈페이지(www.jjmaeil.com) 참조